

형사정책

문 1. 형사정책의 연구대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가 모두 형사정책의 연구대상이 된다
- ② 실질적 범죄성의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사회유해성과 법익 침해성이 제시되고 있다
- ③ 이른바 피해자 없는 범죄는 형사정책의 연구대상이 아니다
- ④ 일정한 행위의 범죄화 내지 비범죄화의 문제는 형사정책의 연구대상이 된다
- ⑤ 집단현상으로서의 범죄와 개별현상으로서의 범죄가 모두 형사정책의 연구대상이 된다

문 2. 베카리아(Beccaria)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와 형벌』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당시의 형사사법제도를 비판하였다
- ② 잔혹한 형의 집행보다는 예외없는 처벌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 ③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④ 형벌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형벌로 인한 고통이 범죄로부터 얻는 이익을 약간 넘어서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⑤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계급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배심원의 절반은 피해자 계급, 나머지 절반은 범죄자 계급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 3.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내 처우의 하나이다
- ② 사회봉사명령에는 처벌기능, 사회에 대한 배상기능, 범죄행위에 대한 속죄기능, 범죄인의 사회복귀 지원기능 등이 있다
- ③ 사회봉사를 통하여 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응보감정을 약화시키고 범죄자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고양시킨다
- ④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선고하고,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 ⑤ 현행법상 성인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부과는 본인의 동의를 요한다

문 4. 피해자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범죄의 피해경험을 보고하게 하는 것이다
- ② 공식범죄통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 ③ 암수범죄의 규모를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④ 강간죄 등 성범죄의 실태파악에 적절하고 유용한 방법이다
- ⑤ 정치범죄, 조직범죄 등의 분석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문 5. 현행법상 자유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금의 방식은 혼거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수형자를 사회와 격리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줄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 ③ 수형자의 가족이 자신의 책임과 무관하게 간접적 형벌을 받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 ④ 단기자유형은 재사회화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범죄학습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 ⑤ 수형자를 전과자로 낙인찍어 사회복귀를 어렵게 함으로써 재범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문 6.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이 제도는 미국의 보호관찰(probation)제도의 발전과 함께 보호관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의뢰하여 이를 법관이 양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공판절차가 사실인정절차와 양형절차로 이분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① 배심제도
- ② 판결전조사제도
- ③ 양형위원회제도
- ④ 양형지침서
- ⑤ 양형예측표

문 7. 이탈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학파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물리적, 인류학적, 사회적 요인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인이 존재하는 사회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량의 범죄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하였다
- ② 생물학적 퇴행성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 ③ 구체적인 증거와 논의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과학적 연구 방법론을 강조하였다
- ④ 사회계약론과 쾌락주의에 근거하여 범죄와 형벌을 설명하였다
- ⑤ 자연범과 법정범을 구분하고, 자연범은 동정심(pity)과 정직성(probity)을 침해하는 속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문 8.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소의 형식성과 경직성을 지양하고 탄력적인 정의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 ②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막으면서 기소전(前) 단계에서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다
- ③ 검찰소추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된다
- ④ 법원 및 교정시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⑤ 부당한 기소유예를 통제하기 위한 현행법상의 제도로는 검찰 항고와 재판상의 준기소절차 등이 있다

문 9. 아노미이론(anomi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뒤르켐(Durkheim)은 처음으로 범죄원인론에 아노미 개념을 도입하여, 급속한 변화를 겪는 사회에서는 도덕적 규제의 감소와 사회연대감의 약화로 인하여 범죄가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 ② 머튼(Merton)은 아노미의 발생원인을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간의 괴리에서 찾았다
- ③ 머튼(Merton)은 아노미상태에서 개인의 적응방식을 동조형, 혁신형, 의례형, 도피형, 반역형으로 나누고, 그 중 혁신형이 범죄와 가장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 ④ 머튼(Merton)은 아노미상태에서 각 개인의 적응방식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
- ⑤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은 최근 들어 증가하는 중산층이나 상류층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에도 무리없이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문 10. 낙인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범죄원인을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찾는다
- ② 범죄행위에 대한 범죄통제기관의 반작용과 그 영향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있다
- ③ 처벌이 범죄를 억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킨다고 본다
- ④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하여는 사회적 통제망 확대를 통하여 낙인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 ⑤ 비판범죄학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장된 것이다

문 11. 비판범죄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어떤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는 과정보다 범죄행위의 개별적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된 관심이 있다
- ② 법의 내용은 권력을 차지한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해진다고 본다
- ③ 형사사법기관은 행위자의 빈부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고 본다
- ④ 법의 기원을 사회적 합의에서 찾는다
- ⑤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가 아니라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문 12.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 중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것은?

- ①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 ②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 ③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 ④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 ⑤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문 13. 현행법상 수강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년법상 단기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 처분시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할 수 없다
- ② 소년법상의 수강명령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단기보호관찰의 경우에는 50시간을,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③ 수강명령의 집행은 법원이 행한다
- ④ 형법상 수강명령은 형사미성년자에게 부과될 수 없다
- 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사범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

문 14. 현행법상 사법적 처분이 아닌 것은?

- 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의 치료보호
- ② 형법상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③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보호처분
- ④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치료감호
- 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문 15. 현행법상 벌금형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 ㄱ. 총액벌금제를 취하고 있으며, 형법총칙상 벌금액의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
- ㄴ.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ㄷ.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 ㄹ. 벌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ㅁ.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ㅁ
- ④ ㄷ, ㄹ
- ⑤ ㄷ, ㅁ

문 16.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원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모두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교육,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다
- ② 일원주의에 대하여는 단순히 행위자의 반사회적 위험성을 근거로 일정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책임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③ 이원주의에서는 형벌은 책임을 근거로,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장래의 위험성을 근거로 과해지는 처분이라고 본다
- ④ 대체주의는 형벌을 폐지하고 이를 보안처분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⑤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이원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문 17. 다음은 네 가지의 사회적 범죄원인론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이 없는 것은?

- 사람들이 법률을 위반해도 무방하다는 관념을 학습한 정도가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관념을 학습한 정도보다 클 때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 중산층의 가치나 규범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의 중심문화와 빈곤계층 출신 소년들이 익숙한 생활 사이에는 긴장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이러한 긴장관계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비행문화가 형성되며 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
- 조직적인 범죄활동이 많은 지역에서는 범죄기술을 배우거나 범죄 조직에 가담할 기회가 많으므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반면, 조직적인 범죄활동이 없는 지역에서는 비합법적인 수단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 사람들은 누구든지 범죄나 비행으로 이끄는 힘과 이를 차단하는 힘을 받게 되는데, 만일 이끄는 힘이 차단하는 힘보다 강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반면, 차단하는 힘이 강하게 되면 비록 이끄는 힘이 있더라도 범죄나 비행을 자제하게 된다

- ① 문화갈등이론(culture conflict theory)
- ② 차별적 기회구조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
- ③ 봉쇄이론(containment theory)
- ④ 비행하위문화이론(theory of delinquent subculture)
- ⑤ 차별적 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문 18. 현행법상 보호관찰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보호관찰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단기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③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사회보호법상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1차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 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보호관찰기간은 3년 이하로 한다

문 19. 성인범과 소년범의 가석방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사기관이 다르다
- ② 허가기관이 같다
- ③ 모두 가석방과 관련하여 보호관찰에 관한 규정이 있다
- ④ 모두 취소가 가능하다
- ⑤ 가석방 종료기간의 원칙적 산정기준이 동일하다

문 20. 밀러(Miller)가 지적한 하위계층의 주요 관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흥분을 유발하는 일 또는 위험스러운 일을 기피하는 것
- ② 육체적인 힘이나 싸움능력을 중시하는 것
- ③ 기만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하는 것
- ④ 경찰, 학교선생, 부모 등으로부터 간섭받는 것은 스스로 나약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인식하여 자신의 일을 뜻대로 처리하는 것
- ⑤ 자신의 미래가 노력보다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운명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

문 21.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자 또는 알코올이나 약물중독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선고한다
- ②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 ④ 치료감호의 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종료된다
- ⑤ 형벌과 치료감호가 동시에 선고된 때에는 형벌을 먼저 집행한다

문 22. 다음은 소년범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A)이며,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으면서,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을 (B)(이)라고 한다. (A)와(과) (B)을(를) 발견한 때에는 (C)은(는) 직접 관할 (D)에 송치하여야 한다

ㄱ. 범죄소년	ㄴ. 촉법소년	ㄷ. 우범소년
ㄴ. 경찰서장	ㄹ. 검사	ㅁ. 보호관찰관
ㅂ. 소년부	ㅇ. 검찰청	

- | | A | B | C | D |
|---|---|---|---|---|
| ① | ㄱ | ㄴ | ㄷ | ㅇ |
| ② | ㄴ | ㄷ | ㄹ | ㅇ |
| ③ | ㄱ | ㄷ | ㅁ | ㅂ |
| ④ | ㄴ | ㄷ | ㄹ | ㅂ |
| ⑤ | ㄴ | ㄷ | ㅁ | ㅇ |

문 23. 보호관찰대상자가 될 수 없는 자는?

- ①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소년
- ② 벌금을 미납한 자
- ③ 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된 자
- ④ 소년원에서 가퇴원된 자
- ⑤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성인

문 24. 소년형사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년형사사건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의 동기와 죄질이 벌금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수 있다
- ③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며,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 ④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소년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문 25. A 초등학교 6학년인 甲(12세)은 학교 앞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었다. 甲의 사건에 대한 조치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A 초등학교의 장은 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② 송치를 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 ③ 송치를 받은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 ④ 관할 소년부가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甲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소년부는 甲을 조사 또는 심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국 제 법

문 1. UN헌장상 UN의 주요기관이 아닌 것은?

- ① 총회
- ② 경제사회이사회
- ③ 사무국
- ④ 인권이사회
- ⑤ 안전보장이사회

문 2. 우리나라의 영해및접속수역법 제1조 본문에 규정된 영해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대한민국의 영해는 ()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 ① 해안선, 3
- ② 해안선, 12
- ③ 기선, 3
- ④ 기선, 12
- ⑤ 기선, 24

문 3. 국가승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승인부여국의 일방적 행위이다
- ② 무조건 또는 조건부로 행하여질 수 있다
- ③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다
- ④ 국가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다
- ⑤ 외교관계의 단절은 승인의 취소를 의미한다

문 4.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국제기구 ICJ에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
- ② 사인(私人)은 ICJ에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
- ③ ICJ규정 제36조 제2항(선택조항)의 수락선언은 조건부로 할 수 없다
- ④ UN의 비회원국은 ICJ에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
- ⑤ ICJ규정의 모든 당사국들은 ICJ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여야 한다

문 5. UN 가입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총회의 단독결정사항이다
-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단독결정사항이다
- ③ 사무총장의 단독결정사항이다
- ④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한다
- ⑤ 사무총장의 권고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다

문 6.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GATT는 법적 성격상 국제조약이지만 사실상 국제기구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 ② WTO는 설립협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국제기구이다
- ③ GATT는 상품무역에 적용되었다
- ④ WTO협정은 서비스무역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도 규제 대상으로 한다
- ⑤ 부속서를 제외한 WTO설립협정의 어느 규정에 대해서도 유보가 가능하다

문 7.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조약은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에 우선한다
- ②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소송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
- ③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제관습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이다
- ④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이 될 수 있다
- ⑤ 사법판결(judicial decisions)은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이 될 수 있다

문 8. 1969년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53조에 규정된 강행규범(jus cogens)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행규범은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을 의미한다
- ② 강행규범은 전체로서의 국제공동사회가 수락하며 인정하는 규범이다
- ③ 강행규범은 그로부터의 이탈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④ 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국제법의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 ⑤ 환경보호, 균등개발, 집단살해금지 는 협약상 강행규범으로 명시되어 있다

문 9. UN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위권은 UN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 ② 회원국은 고유한 권리로서 개별적 자위권을 갖는다
- ③ 집단적 자위권은 UN헌장상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 ⑤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10. A국의 주세(酒稅) 체계에 따르면 자국산 소주에 대한 주세율은 35%이고, 수입 양주에 대한 주세율은 100%이다. 소주와 양주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라고 할 때, A국이 B국산 수입 양주에 대하여 A국 소주에 비해 높은 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무역협정(MTA)상 어떠한 의무에 위반되는 것인가?(A국과 B국은 모두 WTO회원국이다)

- ① 최소시장접근
- ② 최혜국대우
- ③ 내국민대우
- ④ 수량제한의 금지
- ⑤ 관세양허

문 11. 1969년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19조에 규정된 조약의 유보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조약에 () · () · 수락 · 승인 또는 가입할 때에 유보를 형성할 수 있다

㉠ 그 조약에 의하여 유보가 금지된 경우

㉡ 문제의 유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특정의 유보만을 행할 수 있음을 그 조약이 규정하는 경우 또는

㉢ 상기 세항 ㉠ 및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유보가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① 서명, 이의
- ② 비준, 철회
- ③ 서명, 비준
- ④ 교섭, 비준
- ⑤ 서명, 철회

문 1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국제법우위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보고, 국내법은 국제법에 의하여 위임된 부분적 질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 ③ 이원론(dualism)에 따를 때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을 위해서는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변경하는 절차 즉 변형(transformation)이 필요하다
- ④ 국내법우위론에 따르면 국내법과 별개의 독자적 법체계로서의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된다
- ⑤ 국가는 자국의 헌법을 이유로 국제법이나 조약상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고 판시한 국제사례가 있다

문 13.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권리는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에 미친다
- ③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 ④ 모든 국가는 UN해양법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 ⑤ 우리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문 14.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ICJ에 대한 권고적 의견의 요청은 법적 문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 ② ICJ는 권고적 의견의 요청이 있을 경우 9일 이내에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③ UN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는 ICJ에 어떠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UN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를 제외한 UN의 다른 기관과 전문기구는 UN총회의 허가를 얻어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UN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를 제외한 UN의 다른 기관과 전문기구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경우, 요청된 문제는 자신의 활동범위 내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이어야 한다

문 15. 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묶은 것은?

- ㄱ. WTO설립협정에 부속된 다자간무역협정(MTA)은 이를 수락한 회원국에 대하여만 구속력을 갖는다
 - ㄴ. WTO설립협정에 부속된 복수국간무역협정(PTA)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 ㄷ. WTO는 WTO설립협정 부속서 3에 규정된 무역정책검토제도를 시행한다
 - ㄹ.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WTO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ㄹ
- ⑤ ㄴ, ㄹ

문 16. 1982년 UN해양법협약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영해확대를 고려하여 접속수역제도를 폐지하였다
- ②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확대 경향을 반영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를 인정하였다
- ③ 심해저자원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을 수용하였다
- ④ 각국의 이해대립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던 영해의 한계에 관하여 명시하였다
- ⑤ 군도국가들의 요청을 수용하여 새로운 제도로써 군도수역제도를 도입하였다

문 17. UN안전보장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진다
- ②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 ③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 ④ 절차사항에 관한 문제들은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2개 이사국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결정된다
- ⑤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문 18.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선박에 의한 항공기의 선상발진·착륙 또는 탑재행위는 무해통항으로 보지 않는다
- ② 연안국은 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무해통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③ 외국선박의 어로활동과 조사활동 행위는 무해통항으로 본다
- ④ 외국선박이 무기를 사용하여 훈련이나 연습을 하는 것은 무해통항으로 보지 않는다
- ⑤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무해하다

문 19.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쟁해결절차를 통합하여 분쟁해결절차의 통일성을 제고하였다
- ② 패널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한을 정하고 있다
- ③ 역총의(reverse consensus) 제도를 도입하여 패널 보고서의 채택을 용이하게 하였다
- ④ 패널절차 이전에 협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⑤ 패널, 항소, 상고절차의 3심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 20. 1969년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 ① 조약이 그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과 충돌하는 경우
- ② UN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원칙을 위반하여 힘의 위협이나 사용에 의해 조약의 체결이 감행된 경우
- ③ 국가가 다른 교섭국의 기만적 행위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 하도록 유인된 경우
- ④ 다른 교섭국에 의해 국가의 대표가 부패(corruption)하여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경우
- ⑤ 국가간의 외교 또는 영사관계의 부재나 단절이 발생한 경우

문 21. 외교적 보호권(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이다
- ② 국내구제절차완료 원칙은 명시적인 조약규정에 의해서 배제 될 수 있다
- ③ 외교적 보호를 위한 개인의 국적과 국가의 진정한 관련은 코르푸해협(Corfu Channel) 사건에서 강조되었다
- ④ 자연인만이 외교적 보호의 대상이 되고, 법인은 외교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본국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문 22.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WTO설립협정으로부터의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WTO설립협정의 규정과 다자간무역협정(MTA)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상충의 범위 내에서 전자의 규정이 우선한다
- ③ 회원국은 자국의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가 부속협정에 규정된 자국의 의무에 합치될 것을 보장한다
- ④ 각료회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WTO설립협정이나 다자간 무역협정이 회원국에게 지우는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⑤ 각료회의는 WTO 회원국 3분의 2 다수에 의하여 가입조건에 관한 합의를 승인한다

문 23. 1969년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묶은 것은?

- ㄱ.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에 적용된다
- ㄴ. 국제기구 상호간에 체결된 조약에 적용된다
- ㄷ. 이 협약의 모든 규정은 이 협약 발효 전에 체결된 조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ㄹ. 이 협약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제관습 법이 적용된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ㄹ

문 24. UN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요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5분의 4 다수로 한다
- ② 총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연례보고와 특별보고를 받아 심의한다
- ④ 총회의 특별회기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 또는 UN회원국의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 ⑤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UN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이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아니한다

문 25. 세계무역기구(WTO)의 항소제도(Appellate review)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소기구(Standing Appellate Body)는 7인으로 구성되며 이들 가운데 3인이 하나의 사건을 담당한다
- ② 분쟁당사자 외에 제3자도 패널 보고서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
- ③ 항소는 패널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 국한된다
- ④ 항소기구는 패널의 법률적인 조사결과와 결론을 확정,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다
- ⑤ 항소기구 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DSB)가 총의(consensus)로써 거부하지 않는 한 채택된다

노 동 법

문 1.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조항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④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문 2. 국제노동기구(ILO)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ILO는 1946년에 국제연합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 중의 하나로 되었다
- ② 국제연합 비회원국이 ILO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ILO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우리나라는 ILO ‘결사의자유및단체결권보호협약’(제87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 ④ ILO는 근로기준 뿐 아니라 사회보장기준에 관한 협약 및 권고도 채택한다
- ⑤ ILO 총회의 경우 회원국별로 노동자, 사용자, 정부 대표 각 1인씩 참여하고 각자 동등한 표결권을 가진다

문 3.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기본 체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 ②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 ③ 최저생활보장, 사회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 ④ 건강보험,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
- ⑤ 아동복지,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문 4. 현행 법령의 해석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 | |
|--------------|-----------------|
| ㄱ. 초등학교 교사 | ㄴ. 응급실 근무 병원간호사 |
| ㄷ. 재래시장 노점상인 | ㄹ. 은행 지점장 |
| ㅁ. 아파트 경비원 | |

- ① ㄱ, ㄷ
- ② ㄱ, ㄴ
- ③ ㄷ, ㄹ
- ④ ㄱ, ㄴ, ㅁ
- ⑤ ㄴ, ㄷ, ㅁ

문 5.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 단체협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 ③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⑤ 법정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노동쟁의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문 6. 노동법의 법원(法源)이 충돌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합의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 ②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
- ③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
- ④ 취업규칙은 강행법령에 반할 수 없다
- ⑤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문 7.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 ②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 ③ 육아휴직기간의 종료 후 복직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④ 육아휴직기간은 영아가 태어난지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 ⑤ 국가는 육아휴직기간중 당해 근로자에게 생계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문 8.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도 적용된다
- ② 최저임금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과 동일하다
- ③ 최저임금법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⑤ 최저임금법상의 임금개념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개념과 동일하다

문 9.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 및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 ②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 ③ 임신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이 동의하는 경우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 ④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문 10. 근로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 ②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도 향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사용자는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 ⑤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문 11. 근로시간 또는 휴가에 관한 X군의 제도와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Y군의 법적 요건이 올바르게 짝지워진 것은?

[X 군]

- A. 2주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B.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는 특정 근로일 휴무
- C.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긴 경우의 간주근로시간

[Y 군]

- 가. 당사자간의 합의
- 나. 취업규칙
- 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 ① A-가, B-가, C-나
- ② A-가, B-나, C-다
- ③ A-나, B-다, C-다
- ④ A-나, B-다, C-가
- ⑤ A-다, B-나, C-가

문 12. 근로조건 명시 의무 및 그 위반의 법적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ㄱ.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 ㄴ.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효력이 인정된다
- ㄷ.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ㄹ. 근로계약을 해제한 근로자가 여성 또는 연소근로자인 경우 취업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그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문 13. 현행법상 근로관계에 관한 甲과 乙의 주장이 모두 옳은 것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① 甲: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
乙: 단체협약으로도 임금 전액지급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없다
- ② 甲: 사용자는 정당한 파업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乙: 노동조합은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③ 甲: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때에는 사용자는 그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乙: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 ④ 甲: 퇴직금은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乙: 근로자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한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⑤ 甲: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乙: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14.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 ① 일용근로자로서 3월이상 6월미만을 계속 근로한 자
- ②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③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 ④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⑤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문 15.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없다
- ③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한다
- 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문 16.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 회의에 보고·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 ②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③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 ④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관한 사항
- ⑤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문 1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 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③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 개인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 ⑤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할 수 없다

문 1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적 조정(調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사간의 사적 조정에 의한 노동쟁의의 해결을 금지하지 않는다
- ②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노동쟁의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도 사적 조정절차가 개시 될 수 없다
- ③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조정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 ④ 사적 조정에 있어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 ⑤ 사적 조정에 있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절차나 내용과는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을 택할 수 있다

문 19. 노동위원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 ① 위법한 노동조합규약에 대한 시정명령권
- ②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의 판정권과 구제명령권
- ③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권
- ④ 휴면노조의 해산에 관한 의결
- ⑤ 행정기관에 대하여 근로조건개선조치에 관한 권고

문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에 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의 경미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② 회사가 주최하는 행사의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업무의 수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③ 사업장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 ④ 출장 중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부상
- ⑤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문 21. 노동조합(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 전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 ②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는 근로제공의무와 관련하여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지닌다
- ③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는 특별한 정함이나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사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④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가 자신이 주도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노조 전임자에 대해 사용자가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2006. 12. 31.까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2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의결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 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② 노동조합의 해산
- ③ 임원의 해임
- ④ 임원의 선거
- ⑤ 노동조합의 분할

문 23. 괄호 안에 적합한 것만으로 이루어진 항은?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에서는 (A)일, 공익사업에서는 (B)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C)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D)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긴급조정의 경우에는 긴급조정의 공표일부터 (E)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A	B	C	D	E
①	15	20	15	30	20
②	10	20	10	20	30
③	15	20	15	20	15
④	10	20	10	15	20
⑤	10	15	10	15	30

문 24. 현행법상 금지되는 쟁의행위가 아닌 것은?

- ①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
- ②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
- ③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동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
- ④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
- ⑤ 교원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문 25.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뿐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②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③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구제명령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
- ④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 형이 부과된다
- 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경 제 법

- 문 1.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아닌 것은?
- ①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②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③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④ 사업자의 이익 중 일부를 공동으로 향유할 권리
 - ⑤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문 2.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의무가 아닌 것은?
- ①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 ②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③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 ④ 소비자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 ⑤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 문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 ② 수요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될 수 없다
 - ③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 ④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변경했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의 인하명령을 할 수 있다
 - 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문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기준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

ㄱ. 부당한 자산지원
ㄴ. 공동의 거래거절
ㄷ. 구입강제
ㄹ.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ㅁ. 부당염매

- ① ㄱ, ㄷ, ㅁ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ㄷ, ㄹ, ㅁ
- ⑤ ㄴ, ㄹ, ㅁ

문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규율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같은 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행정적 규제로는 시정조치, 과징금제도 등이 있다
- ④ 형사적 규제로는 징역과 벌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⑤ 민사적 규제로는 같은 법에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구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문 6.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보호법상 규제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영업정지처분
- ② 판매금지명령
- ③ 수거·파기명령
- ④ 제조금지명령
- ⑤ 과태료의 부과

문 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청약철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② 청약철회권이 행사된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하고, 방문판매자는 지급받은 재화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 ③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이 방문판매자에게 도달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④ 방문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재화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⑤ 방문판매자는 재화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로 재화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재화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문 8.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것도 약관이 될 수 있다
- ② 약관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어야 한다
- ③ 약관의 일부 조항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에 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됨이 원칙이다
- ④ 약관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약관이 될 수 있다
- ⑤ 약관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것이면 족하고 실제로 사용되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9.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선박법에 의한 선박의 할부거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③ 부동산의 할부거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⑤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포함)의 할부거래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문 1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다단계판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학생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 ③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다
- ④ 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후원수당을 차등지급해서는 아니된다
- ⑤ 다단계판매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침해정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문 11.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② 매수인의 사정변경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③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④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⑤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서상 약정된 목적물의 인도 등의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문 1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약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사실상 이익이 있는 자는 약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ㄴ. 약관의 심사는 약관심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 ㄷ. 약관의 심사청구는 구두로 하여도 무방하다
- ㄹ. 사업자단체도 자신이 마련한 표준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ㅁ. 한국소비자보호원도 약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 ⑤ ㄷ, ㅁ

- 문 1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상당한 이유나 부당성 여부를 묻지 않고 무효로 보는 약관조항은?
- ①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약관조항
 - ② 고객에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 ③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약관조항
 - ④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된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약관조항
 - ⑤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

- 문 14. 소비자보호법상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 또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의 구제를 청구한 소비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피해에 대한 재판상의 구제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은 피해구제 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관계인의 법령위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⑤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한 때에는 기명날인된 조정서의 분쟁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문 1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상 사업자단체에게 금지된 행위의 유형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 ①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 ②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③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 ④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⑤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문 1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경우
ㄴ.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우
ㄷ. 지주회사가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ㄹ.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ㄱ,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 문 1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도 회사의 합병시에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다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더라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③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도 다른 국외회사에 대하여는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 문 1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제재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출자총액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취득한 주식의 처분이 명하여 질 수 있다
 - ②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이 채무보증의 해소 없이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 ④ 상호출자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상호출자를 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범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주식의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지주회사가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문 1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지주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 ③ 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 ④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한 날부터 1년간은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 ⑤ 벤처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인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 문 2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회사의 설립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회사의 합병이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 ④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대상회사가 기업결합신고를 한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합병등기를 한 경우
 - ⑤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의 설립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문 2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기업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서 제외된다
 -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모든 회사는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주권상장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무의결권주식 제외)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⑤ 기업결합의 신고는 당해 기업결합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문 22. ()안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독점 등 경쟁제한행위를 원칙적으로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거래제한 행위를 당연위법으로 보아 규제하는 입법주의를 ()라 하고, 반면에 독점이 당연히 위법시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여 폐해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규제하는 입법주의를 ()라고 한다. 또한 독점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규제는 법원의 사법적 절차에 의해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에 의해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로도 나눌 수 있다. 대개 ()는 폐해 발생여부를 행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판단하므로 행정규제주의와 결합되고, ()는 위법성판단을 일반원칙에 따라 사법부에서 행하도록 하므로 사법규제주의와 결합되는 경향이 있다

-보기-		
ㄱ. 원인규제주의	ㄴ. 당사자주의	ㄷ. 행정규제주의
ㄹ. 절충주의	ㅁ. 직권규제주의	ㅂ. 입법규제주의
ㅅ. 사법규제주의	ㅇ. 폐해규제주의	ㅈ. 결과규제주의

- ① ○ - ㄱ - ㄴ - ㅈ - ㅁ - ㄱ
- ② ○ - ㄱ - ㅅ - ㄷ - ○ - ㄱ
- ③ ○ - ㄱ - ㅅ - ㅂ - ㄹ - ㄱ
- ④ ㄱ - ○ - ㄷ - ㅅ - ○ - ㄱ
- ⑤ ㄱ - ○ - ㅅ - ㄷ - ○ - ㄱ

- 문 2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 ②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대규모내부거래행위는 거래금액이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
 - ③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대규모내부거래에는 회사의 부동산, 주식 또는 회사채를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 ④ 가지급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대규모내부거래에 포함될 수 있다
 - ⑤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일상적인 거래 분야에서 약관에 따라 행하는 정형화된 대규모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공시는 면제된다

- 문 2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합의 이외에도 합의의 이행이 있어야 한다
 - ② 판례에 의하면 일방 사업자의 비진의의사표시에 의한 합의는 사법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 ③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 ⑤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 문 2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적용대상이 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사업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대리인의 경우 사업자 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